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추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으며, 금리상승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특위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어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영세사업자가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국세청 측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경 50→30조원 하향조정... 소상공인 패키지 다음주 발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현 50만원보다 올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